與 정계개편 논의 '각개약진'

지도부 '중심잡기'속 지역·계파별 모임 활발
통합추진파 23명 회동 "민주세력 대통합을"

정계개편 방향을 둘러싼 여당 내부의 움직임이 가속도가 붙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질서있는 정계개편 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한번 터진 정계개편론의 물꼬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린우리당 비대위는 지난 7일 오후 김근태 의장 주재의 만찬간담회에서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9일까지 정계개편의 '밑그림'을 마련, 의원총회에 보고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8일 오전에는 자문위원단 회의를 열고 '자문위원들이 각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계개편론에 대한 여론과 견해를 제시하고 이를 수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으나 당 내부의 정계개편과 관련한 움직임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우선 8일 통합론의 대표 주자인 염동연(광주 서갑) 의원은 여의도 중국음식점에서 '통합추진파' 의원 오찬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광주지역 통합파인 양형일(광주 동) 의원과 전남지역 통합파인 주승용(여수 을), 우윤근(광양·구례), 유선호(영암·장흥) 의원을 비롯, 수도권 통합파인 임종석, 이계안, 이근식 의원 등 당내 통합파 의원 23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민주세력 대통합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문제 등이 논의됐는데 과반수를 넘는 의원들은 전당대회는 곧 분당대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국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며 불가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5~6여명의 의원들은 전당대회 개최를 통해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지도부가 강력하게 통합신당 창당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통합신당 논의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 배제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동연 의원은 "23명 모두가 민주세력 대통합에 이견이 없었다"라며 "다음달 지도부가 정계개편 방향에 대한 밑그름을 제시한 이후 다시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계개편 방향과 관련해 호남, 충청, 수도권 등 이른바 '서부 벨트'에 속한 여당 의원들의 모임도 연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통합논의에 적극적인 지역내 여론을 의식한 이들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소모임을 통해 서로 주파수를 조율하고 행동을 통일시키고 있다.

우선 광주와 전남지역 의원들이 지난 7일 각기 오찬 모임을 가진데 이어, 충청권 의원 10여명도 7일 오후 이용희 국회 부의장 주재로 여의도에서 만찬 모임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충청권 의원은 "전체적으로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전했다.

여기에 전북 출신의원들은 15일 정례회동을 가질 예정이며, 수도권 남부지역 의원들도 내주중 모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8일 오후 열린우리당 이인영, 백원우 의원 등이 국회의안과에 완전국민경선 관련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햇볕정책 기조 계속돼야"

고건 前총리 "현정부 포용정책과 큰 차이"

고건 전 국무총리는 8일 "국민의 정부 시절 햇볕정책과 참여정부의 포용정책은 안보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고 전 총리는 이날 안동대 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했고, 성과가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엄동설한에도 햇볕은 비춘다"며 "햇볕정책의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전 총리가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의 차이를 강조한 것은 현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표명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최근 공개적으로 햇볕정책 수호 행보에 나선 것에 대해 "나라가 어려울 때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위해 애쓰는 것이라고 본다"며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애쓰시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가 햇볕정책 때문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핵보유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참여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해서는 "한 핏줄이면서도 '적'(敵)인 북한의 양면적 성격을 무시한 편향적 유화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2월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했을 당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반한 엄청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그 때 정부가 엄중한 항의와 경고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강산관광 등 대북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계속돼야 한다"며 "다만 정부가 금강산관광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전 총리는 최근 정계개편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 관련, "국민을 대통합하는 통합신당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라며 "나를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으로 독자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DJ 이번엔 부산 방문

盧대통령 '정치적 고향' 방문…'정계개편 역할론' 증폭

김대중 전 대통령이 8일 부산을 찾았다.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 교통장관 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서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은 "지난 달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동교동을 직접 찾아와 참석을 요청해 수락하신 것"이라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ESCAP에서 28개국 정부가 '아시아 횡단철도 연결 정부 협정식'을 갖는 만큼 '철의 실크로드'를 제안했던 김 전 대통령이 기조연설의 적임자라는 것이 추 장관의 초청 요지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현실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철의 실크로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종단하는 철도운행이 필수적"이라며 "한반도 종단철도 운행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는 허남식 부산시장과의 오찬 및 대회 연설을 제외하고는 공식 행사가 잡힌 것이 없다. 단순한 행사 참석인 셈이다.

그러나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의 파격적인 DJ 자택 방문 이후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영남 방문은 시기적으로 여러 관측을 낳게 하기에 충분했다.

앞서 7일 노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한 노 대통령의 단순 일정을 놓고 '호남 민심잡기의 두번째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 것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두 분 모두 오래 전에 잡힌 의례적인 행사에 참석한 것이겠지만, 영남출신인 노 대통령이 호남을 찾고, 호남 출신인 김 전 대통령이 영남을 방문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우리당의 차기 대선주자군으로 분류되는 김혁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정계개편의 동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권내에서 정계개편의 방향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결국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개혁세력의 재결집이라는 지향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두 전.현직 대통령의 협력관계가 내년 대선에 상당한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연합뉴스

"정계개편은 정치 투기꾼들의 도박정치"

강재섭 대표 "관리형 내각구성 민생 전념해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8일 여당발 정계개편 움직임과 관련, "정계개편은 정치 투기꾼들의 도박정치이자 망국적인 지역구도를 되살리려는 구태정치"라며 인위적 정계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권력의 단맛을 다 누리고 나서 책임은 안지겠다니 말이 되느냐"며 "'떴다방'식 '한탕정치'로 판을 흔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또 "(정계개편을) 뒷받침하려는 정략적인 선거법 개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여당이 추진중인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관련 선거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들로 관리형 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여당 당적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 내각은 민생과 공정한 대선관리에 전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이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바로 정권교체"라면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피곤하게 만든 정권을 그대로 놔둘 수 없는 만큼 한나라당이 선봉에 서서 이를 악물고 기필코 해내겠다"고 밝혔다.

대량살상무기 PSI(확산방지 구상) 참여 확대 문제에 대해 그는 "이를 꺼린다면 국제사회 불신과 한미동맹의 균열은 깊어질 것이다. 다만 PSI 집행은 유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대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온다면 대담하고 실질적인 대북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대북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이행기구 설립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입주, 북한물품 구입 등 북한 핵개발을 도와주는 일을 지금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국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그는 "대통령이 뭐라고 변명해도 이제는 안 믿는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하고 청와대와 정부 관련 담당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